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한국산업위생협회

정부·국회

발전 기금 모금 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단합
 - ▷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
3. 기부혜택
 - ▷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 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 운영방법 :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 정기적인 감사 실시
 -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
(010-2345-3035)

고용노동부,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 외에도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노사의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29.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하고,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19

정부·국회

공공부터 안전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4일(화) 1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먼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간다. 그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9.1.)」,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장관은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37

노사발전재단, 대만노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을 위한 협력 간담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대만노총(CFL, Chinese Federation of Labour) 원 커밍 위원장, 원 총위 사무총장 등 대표단 4명이 11월 6일(목) 재단을 방문해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양국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중장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학습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만노총 소속 대표 4명과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국제노동본부장, 노사상생본부장,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책임컨설턴트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공정일터 조성 및 차별 개선 사업,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대만 측은 고령화와 산업 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만노총의 정책 참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령차별 해소,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세대 정책 및 산업발전촉진법」, 「중장년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통해 연령차별 금지,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포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과 노사상생 경험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접점으로 평가된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국이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향후 교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양국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과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십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47

정부·국회

안전보건공단

**(참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1.11.(화)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지방 발주공사 중대재해 현황 등을 공유,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26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각 시·도는 그간 지역 단위로 추진해 온 특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와 취약 분야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요인 개선, 자체 발주 공사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소규모 현장,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상시적인 협업 체계 구축, 정보 공유 강화, 지역별 합동 점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체적으로 협력하여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실행해 나갈 때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도 정책적 지원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지방정부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568

주간 사망사고 속보

[10/24, 경기 김포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중 끼임
[10/25, 강원 원주시] 지게차 운전 중 넘어져 깔림
[10/25, 경북 경주시] 저수조 내부 작업 중 쓰러짐
[10/27, 부산 사하구] 크레인으로 밸브 고정작업 중 밸브에 맞음
[10/28, 경기 고양시] 소화약제 용기 밸브 해체 작업 중 용기 폭발
[10/29, 경기 성남시] 후진 중인 굴착기에 부딪힘
[10/30, 경남 밀양시]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맞음
[10/30, 경북 고령군] 측사 지붕에서 이동 중 떨어짐
[11/1, 강원 원주시] 토사 반출작업 중 적재함에 부딪혀 깔림
[11/1, 충남 금산군]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떨어짐
[11/4, 경기 수원시] 하역 준비 작업 중 중량물에 깔림
[11/4, 강원 인제군] 구조물 상부 철판 설치 작업 중 떨어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새로운 30년 열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민주노총 30년사 출판기념회 및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1995년 창립 이후 30년간의 투쟁과 성과를 돌아보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30년의 결의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주노총의 30년 역사를 집대성한 《민주노총 30년사》 출판을 기념하고, 창립 30주년을 맞아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되새기는 자리였다.

출판기념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87년 노동자대투쟁부터 96년 노동법 개정 투쟁까지 민주노총의 역사는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기록”이라며 “이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배제된 이들의 걸음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30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사 편찬 총괄을 맡았던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당시 42만 명 이던 조합원이 2024년 106만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여성과 비정규직 조합원의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제는 대공장 중심의 조직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대표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별노조 전환을 통해 조합원 10명 중 9명이 산별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전국 업종교섭의 사례도 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조직적 성과를 설명했다.

조돈문 전 정책자문위원장은 “민주노총 30년사는 단순한 기록집이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의 ‘정사(正史)’”라며 “민주노총이 스스로의 역사와 책임을 성찰하고, 향후 3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은 30주년을 맞은 민주노총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의 30년은 조합원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바랐던 모든 사람들의 역사였다”며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사회는 진보한다는 믿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울타리 밖의 노동자’들과 더 넓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에 불과하고 민주노총의 조합원 비율이 5% 남짓이지만, 이 힘이 더 커질수록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무너질 것”이라며 “초기업교섭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nodong.org/statement/7912269>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5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노동입법 요구'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320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 7천원 증가하였다. 정규직 근로자는 389만 6천원(10만원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는 208만 8천원(4만원 증가)이다.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차이는 180만 8천원으로 지난해 174만8천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농어업(이주)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1천만여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산별교섭 구조 구축 등을 대선요구로 제시하였다.

민주노총의 핵심입법요구인 노조법 2·3조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민주노총은 초기업교섭촉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근기법 개정안, 작업중지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급하게 논의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착취 금지 근기법 개정안, 용역업체변경시 고용승계를 위한 사업이전시 노동자보호법 제정안, 공무원위원회법 제정안, 정년연장법(고령자고용법개정),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적용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nodong.org/statement/7912311>

오이레터

교대근무자를 위한 건강한 수면습관 가이드

수면위생이란?

수면위생은 수면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수면환경 개선방법을 의미합니다. 수면위생 지침은 1970년대 Peter Hauri 박사가 성인 불면증 관리 도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는 1977년 출판된 저작 『Current Concepts: The Sleep Disorders』(Upjohn)에서 최초로 수면위생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오늘날 수면위생지침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수면위생은 불면증개선에 효과적인가?

수면위생이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수면위생교육(Sleep Hygiene Education)에 대한 RCT를 분석한 메타연구(42개 연구)에 따르면 수면위생교육(Sleep Hygiene Education)을 받은 집단에서 불면증지수(ISI)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MD = 3.4, 95% 신뢰 구간 2.08 - 4.64).

불면증지수의 총점은 28점이며, 15점 이상이면 중등도 불면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균 3.4점의 개선이 있다면 충분히 권장할만 합니다. 참고로, 수면위생교육의 효과는 수면장애 인지행동치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수면위생교육 연구의 신뢰도는 제한적이었는데, 연구의 특성 상 이중맹검이 어려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편향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대근무자를 위한 수면위생지침

수면위생지침은 교대근무자에게서도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없습니다. 관련 연구가 제한적이고, 유의한 효과가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련 연구가 적기도 했지만, 교대근무자들에게 적합한 수면위생지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면위생지침에서는 낮잠을 제한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6-8시간 동안 카페인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낮잠과 카페인 섭취는 교대근무자들이 적응을 위해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고, 모범적인 피로관리전략으로 여겨집니다. 즉 수면전략과 피로관리전략이 상충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53>

고정야간작업,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4시간 사회와 늘어나는 야간근무

현대 사회는 24시간 운영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교대근무는 의료, 운송, 제조, 응급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병원과 같은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야간전담 간호사(나이트킵)' 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존의 열악한 순환 교대근무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간호사들은 높은 노동 강도와 교대근무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야간에만 고정적으로 일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야간근무를 원치 않는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야간 노동을 원하는 인력은 가산 수당을 통해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절충적인 목표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전담근무는 순환 교대근무 비해 휴일(Off) 수를 늘릴 수 있다 점도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병동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야간전담제를 도입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했습니다.

수명을 깎아서 돈버는 느낌

이렇게 야간에만 일하는 근무 형태가 확대되면서, 과연 이러한 형태의 근무형태가 노동자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간호사들은 야간전담근무를 "수명 깎아서 돈버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고정야간 vs. 순환교대: 건강영향 비교

교대근무의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고정(상시) 야간근무와 순환 교대근무를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주간근무자를 대조군으로 하여 고정 야간근무와 순환교대제를 각각 나눠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았습니다.

한 메타분석 연구 총설 (2025)에서는 기존 여러 메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야간전담 근무와 순환 교대근무의 건강영향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이 리뷰에 따르면, 고정 야간근무의 경우 심혈관 및 대사 질환 위험이 순환교대근무보다 더 높았습니다. 반면, 순환 교대근무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뚜렷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 5 - <https://52letter.stibee.com/p/154>